

## [ 종합·해설 ]

盧대통령 탈당 이후 정국

## 정계개편 탄력…대선구도 격랑

노무현 대통령이 22일 오후 정세균 의장 등 열린우리당 새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탈당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300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정국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탈당하면 우리당은 여당 지위를 잃게 되면서 법률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없는 상황이 초래돼 당정관계와 국회운영 틀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또 우리당과 탈당파, 민주당 등 범여권의 통합신당 주진 움직임도 노 대통령의 탈당을 계기로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 대선구도에 도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탈당 의사 표명으로 곧바로 학명숙 총리를 포함한 일부 정치인 출신 각료에 대한 개각 및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헌 추진과 민생 협안, 개혁 과제에 전념하는 쪽으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전환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우리당 탈당 절차를 밟는 직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발의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위치에서 사회적인 담론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의 탈당으로 열린우리당은 '여당 프리미엄'을 상실하고 흘로서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 대신, 노 대통령과의 연계로 인해 초래됐던 '여당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통합신당 추진 등 정계개편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고, 추가 탈당을 막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총리의 당 복귀가 이뤄지고 외부에

홀로된盧 개헌안 등 국민 직접 설득 나설듯

우리당 집권당 프리미엄 상실…추가 탈당 주춤

서 거론되는 대권 예비주자들의 영입이 성과를 거두면 범여권의 대권 경쟁 구도는 지금보다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탈당이 오래전부터 예고돼온 수순인 데다 한나라당 대선주자 간의 겹증공방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어서 정치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

망했다.

통합신당모임 등 탈당과 의원들 사이에 들어감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인 '여당'이 없어지게 돼 향후 당정관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 탈당으로 당장 우리당은 '집권 여당' 이란 타이틀을 빼야 한다.

한나라당은 법률적 여당이 사라져 원내 제1당으로서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나 동시에 국정운영의 책임을 나눠야 하는 부담을 함께 안게 됐고, '노 대통령+여당'이라는 타깃이 변화한 상황에서 대선정국 운영 기조의 수정도 불가피하게 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노무현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당직자들과의 만찬에 앞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내 잠재적인 대권주자로 분류돼온 학명숙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과 함께 총리직을 내놓고 우리당에 복귀함에 따라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총리는 22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로 출근하지 않았고 오후에 예정됐던 김하중 주중대사 접견 일정도 취소했다.

한 총리는 대신 김상진 비서실장과 김석환 공보수석 등 수석비서관들을 삼정동 공관으로 불러 향후 거취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전날에도 대구·경북지역에서의 민생행보를 예정대로 강행한 뒤 귀경, 밤 늦게까지 측근들과 향후 거취와 진로를 숙의했다.

그러나 연일 계속되는 대책회의는 사의 표명 시기와 방법 등 총리직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가 초점이었지 당 복귀 이후의 진로에 관해서는 이미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한 총리의 거취 표명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이뤄질 것인 만큼 관측이 있었으나 이보다 훨씬 빨라진 것이다. 한 총리는 이미 지난 연말 개각설이 나온 직후부터 언제든지 물러날 상황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해왔고, 특히 설 연휴를 전후로 청와대가 노

다는 '정치인으로 복귀'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당분간 열린우리당 당적을 당

분간 보유하겠지만 향후 행보는 우리당이란 틀에 얹매이지만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혀지고 있다. 나아가 '잠룡'의 꼬리표를 떼내고 본격적인 여권 내 대권 레이스에 합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본격적인 대권주자 행보에 나

설 경우 현정사상 최초의 여성총리로서의 역할을 '무난하게' 수행한 점과 진보와 보수를 두루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점 등이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사활을 건 대권 레이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지지층과 조직 및 세력이

없다는 점은 한 총리의 행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변수들이라 할 수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당복귀 한총리  
대권 레이스  
합류할 듯**

알려졌다.

당초에는 한 총리의 거취 표명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이뤄질 것인 만큼 관측이 있었으나 이

보다 훨씬 빨라진 것이다. 한 총리는 이미 지난 연말 개각설이 나온 직후부터 언제든지 물러날 상황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해

왔고, 특히 설 연휴를 전후로 청와대가 노

는 '정치인으로 복귀'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당분간 열린우리당 당적을 당

분간 보유하겠지만 향후 행보는 우리당이란 틀에 얹매이지만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혀지고 있다. 나아가 '잠룡'의 꼬리표를 떼내고 본격적인 여권 내 대권 레이스에 합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본격적인 대권주자 행보에 나

설 경우 현정사상 최초의 여성총리로서의 역할을 '무난하게' 수행한 점과 진보와 보

수를 두루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점 등이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사활을 건 대권 레이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지지층과 조직 및 세력이

없다는 점은 한 총리의 행보에 부담으로 작

용할 변수들이라 할 수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與 소멸…국회 주도권 한나라로

당정협의 모든 교섭단체 다각화

## 당정관계 변화 불가피

노무현 대통령이 22일 열린우리당 탈당 의사를 밝히고, 공식적으로 탈당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인 '여당'이 없어지게 돼 향후 당정관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 탈당으로 당장 우리당은 '집권 여당' 이란 타이틀을 빼야 한다.

현재 '당정협조부'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은 '여당'의 개념을 대통령이 당적을 가진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당은 노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국정운영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이 탈당을 전명함에 따라 법적 의미에서의 여당 지위는 잃게 된다. 실제로 17대 총선이 끝나고 노 대통령이 입당원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우리당은 '정신적 여당'을 자처했지만, 원내선 3당으로서 제한된 영향력만 행사할 수 있었다.

우리당이 여당의 지위를 잃는다면 특히 당정관계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의 여당 구별이 없어지게 되는 만큼 정부는 그동안 우리당을 중심으로 진행시켜온 당정협의를 모든 교섭단체를 대상으로 다각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03년 9월 노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해 입법부 내에 여당이 사라졌을 때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우리당과 '등거리'로 정책조율 작업을 펼쳤다.

우리당으로선 지금까지 각종 정책 입안 과정에서 독점적으로 해당부처와 의견을 조율할 기회를 가졌지만, 앞으로는 같은 특권을 상실하는 셈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와 의견교환이 계속 이뤄지겠지만, 한나라당이나 통합신당모임 등과 함께 '원 오브 데모(여당 중 하나)' 차원에서 제한된 의견만 개진하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청와대 관계자도 "대통령이 탈당할 경우 각 정당, 국회 지도부는 개별적 관계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오히려 각 정당,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은 여당이 대통령이나 정부와 우선 협의하면 국회에서 여당이 국회에서 그 방향으로 교섭단체들과 협의를 하고 관찰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이제 그 단계가 없어진다"며 "각 개별 정당과의 관계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정부로선는 각 당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 관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당은 당장 상임위 구성에서도 불이익을 볼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소속 의원들의 집단탈당으로 원내 1당 자리를 한나라당에 내준 뒤에도 '집권여당의 책임'과 '관행'을 들어 공식이 된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요구한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이어

재임중 당적 포기 4번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탈당을 전명함에 따라 재임중 여당 당적을 포기하는 4번째 대통령이 됐다.

특히 노 대통령은 현정사상 처음으로 재임중 여당을 두번이나 이탈하는 첫 대통령으로 남게된다. 이는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 9월 29일 노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한 '전례'를 포함한 경우다.

현직 대통령이 여당을 떠난 것은 6공화국 마지막 해인 92년 9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이 민주당 명예총재직을 버리고 탈당한 것이 '효시'였고, 그 후 지금의 노 대통령에게 이르기까지 5년 주기로 대통령이 탈당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97년 11월 7일 김영삼(YS) 대통령이 신한국당을, 5년 뒤인 2002년 5월 6일 김대중(DJ)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했던 것.

우리 현정사에 오점이자 하나의 '전통'

처럼 끼어온 현직 대통령의 당적 포기는 대선의 해에 이뤄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그 중심에는 현직 대통령과 여권 내부의 '미래권력' 간의 갈등이 내재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YS와의 갈등이 탈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YS 역시 임기말 '대통령 때리기'의 희생양이 됐다. 당시 YS는 한보사태와 아들 현철씨를 비롯한 민주계 실세들의 잇단 구속 등으로 퇴임 1년을 남기고 급습한 데임력을 맞았다.

DJ의 경우 당시 지지율이 바닥에 떨어졌다. 여당의 활로를 터주기 위해 자진해 탈당한 케이스로 기록되고 있지만 '홍삼 트리오'라는 신조어를 넣은 세 아들 등 측근들의 잇단 게이트 문제가 탈당의 직접적 동기가 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타의'로 당을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연합뉴스